

---

민간 활력제고를 위한  
**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**

---

2022. 7. 13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순서

I. 검토 배경 .....	1
II. 추진 계획 .....	2
III. 향후 일정 .....	5

## I. 검토 배경

◇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·창의를 가로막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에 대한 일제 점검·개선 필요

\* "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, 형량 합리화 등 추진"(새정부 경제정책방향, '22.6.16)

### ① 민간 경제활동 관련 형벌규정 과다 → 자유로운 경영활동 저해

-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이 점차 증가
- 형벌 유형 중에서도 '징역 또는 벌금', '징역' 등 인신구속형 처벌이 다수를 차지

### ② 글로벌 기준, 시대변화와 괴리된 형벌규정 존재 → 경쟁력 약화

- 주요국 대비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 위축 및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 감소 우려\*
- \* "한국 CEO들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"(AMCHAM 회장)
- 생산기술 발달, 국민의식 변화 등에 따라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벌규정도 존재

### ③ 민간 경제활동 관련 불확실성·어려움 증대 → 개선 요구 집중

- 공정경제 3법, ILO 관련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 국회통과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기업활동에 대한 불안·애로가 증대
- 공급망 혼란, 물가 급등에 따른 스테그플레이션 우려, 탄소 중립 대응 등 대내외 도전요인 확대 → 민간부담 경감 필요

## Ⅱ. 추진 계획

### 1 검토대상 및 기준

#### ① [검토대상]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조항

-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, 경제 6단체 및 전문가를 통한 민간의견 수렴 등을 통해 既과악된 형벌조항 전수
  - 향후 지속적인 발굴 및 건의접수 예정

#### ② [검토기준] 5대 기준에 의거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·합리성 검토

##### ①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·최소한의 형벌인지

- 민간 경제활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시 오히려 시장주의에 따른 활발한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경우

##### ②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

- 다른 법으로는 법익을 보호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보충적으로 형사제재 수단을 개입하는 형법의 특성에 어긋나는 경우

##### ③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

-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정당성과 균형을 현저히 잃거나,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

##### ④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한지

- 각국의 사전규제, 사후처벌, 기업문화, 비형벌적 제재수단을 종합고려 해봤을 때 국내 형벌조항이 과도한 경우

##### ⑤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

- 기술변화, 국민인식 변화 등으로 입법환경이 변경된 경우

## 2 개선 방향

### □ 대상 형벌규정 ①비범죄화, ②합리화 추진

- ① (비범죄화) 국민의 생명·안전,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·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 → 삭제\* 또는 행정제재\*\*로 전환

\* 징역, 벌금형 관련 조항 삭제 / \*\* 과태료 등으로 전환

#### < 예시 사례 >

- ㉠ (서류작성·비치 위반 처벌) 생명·안전, 중대한 경제적·환경적 위해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
- ㉡ (행정조사 거부 등 처벌) 불법행위 수반 행위(위계, 폭행 등)가 아닌 단순 행정조사 거부행위

- ② (합리화)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, 보충성(先행정제재, 後형벌), 비례성(위법행위와 처벌간 균형) 등 원칙에 의거 합리화\*

\* 형량 완화, 책임의 정도(미수/기수 등)에 따른 형량 차별화 등

#### < 예시 사례 >

- ㉠ (예비·음모 등 본죄에 준한 처벌) 형법상 예비·음모 등은 처벌하지 않으며 처벌하더라도 감경하여 처벌
- ㉡ (상해·사망 동일 법정형 처벌) 기업활동 관련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하여 법정형의 차등화(상해는 감형) 필요
- \* 형법은 동일범죄로 발생한 결과가 상해와 사망인 경우 법정형을 차등화 하고 있음
- ㉢ (선택형 없는 징역형) 국민의 생명·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 도입 필요

### 3 추진 체계

#### □ [TF 구성]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신설

- (TF 본회의) 기재부 1차관·법무부 차관(공동단장), 관계부처 + 민간 전문가로 구성
  - 과기정통·행안·문체·농식품 산업·복지·환경·국토·해수, 공정·금융위, 식약처
- (실무회의) ①1급(기재부 차관보, 법무부 법무실장) 또는 ②국장급(기재부, 법무부) 주재 사전 실무회의\* 운영
  - \* 개선안을 마련한 해당부처 및 TF 민간전문가 일부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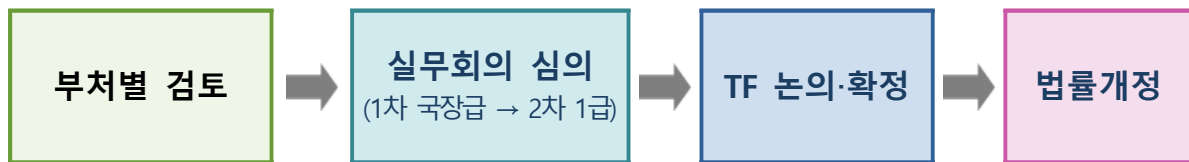
#### □ [TF 운영] 부처별 개선안 마련 → 실무회의 심의 → TF 상정

- ① (각 부처) 소관 경제형벌 조항에 대한 일제 검토를 통해 개선 가능여부 판단 및 개선안 초안 마련
    - 개선 가능 조항은 비범죄화 또는 합리화 방안 마련하고, 개선 불가능 조항은 5대 기준에 의거 소명
  - ② (실무회의) 부처가 제출한 개선안 초안에 대한 타당성 심의
    - (개선조항) 법무부(형사법제과 등) 의견 조회·반영 → 확정
    - (미개선조항) 부처 소명자료, 민간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의견 수용여부 결정
- ⇒ 불수용시 ①부처 재검토 요구 또는 ②개선방안 합의 도출

③ (TF 본회의) 심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개선안 논의·확정

- 개선안이 준비되는 부처부터 개선안을 상정
- 既발표 개선안에 대한 법률개정 등 이행 현황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지원

< 경제형벌 개선 업무 흐름 >



### Ⅲ. 향후 일정

◇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을 시작으로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준비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TF에 상정해 확정·추진

① 부처별 검토 및 개선안 마련(7월 2주~)

② 실무회의 심의(8월~)

- 부처별 개선안 초안에 대해 심의 후 확정

③ 후속 TF 회의 개최(연중 수시 개최)

- 개선계획 순차 발표 및 既발표과제 이행현황 점검